

보도자료			
보도일시			
담당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010-3693-3971	
	김소영(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010-3702-4570	
배포일시	2017. 10. 22. 일	총 5매 (사진 6장)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대한 미래세대 입장 발표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 일시 : 2017년 10월 22일(일)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 순서 (사회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1) : 이성주 (15, 공릉중학교 2학년)
- 발언(2) : 박성은 (17)
- 발언(3) : 곽효진 (17)
- 발언(4)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 만0세부터 만18세까지, 19명의 미래세대가 나란히 서서 탈핵 메시지 피케팅

<현장 발언>

■ 발언(1) : 박성은 (17, 오디세이 학교)

인터넷에서는 원전이 필요한 이유 등을 주로 찾아볼 수 있었고 원전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습니다. 하지만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전은 송전탑 문제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해야 할 세대인 저희가 저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탈핵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미래세대인 저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발언(2) : 곽효진 (17, 오디세이 학교)

학교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통해 원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밀양에 방문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밀양 주민 중 한 분에게서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저희가 살아올 시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주 (15세, 공릉중학교)

저는 원전을 자폭용 핵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터지면 끝장입니다. 원전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은 마비될 것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다? 어른들이 하는 주장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미래세대가 책임지는 이 상황이 어이없습니다. 이번 공론화 시민참여단에는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입니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알았겠습니까?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입니다. 지금 50대가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겨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짓겠다고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이미 돈을 들여서 공정률이 29%고 비용도 1조6천억원 정도가 들어간 원전을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원전정책을 축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세번째는 ‘공론화’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친원전 쪽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어린 청소년들이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일종의 무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 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어있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배제된 것은 이번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기자회견문>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제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수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

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켜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켜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슴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도 수 백 만 명이 거쳐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과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려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메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현장 사진>



